결 정

사 건 명 제2017-11호 견책처분 취소 등 청구

소 청 인 성 명 ○ ○ ○

소 속 ○ ○ ○

직 급 지방○○○○주사

주 소 ○○시 ○○로 ○○○번길 ○○, ○○○호(○○동, ○○APT)

피소청인 ○○○지사

피소청인이 2017. 1. 3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 으로부터 취소를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소청인이 2017. 1. 31.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 별지와 같음 ”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요지

가. 소청인은 2014. 10. 24.부터 2016. 7. 21.까지 ○○○○○○본부 구)○○○○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 중 “수산생물질병 예찰용 방역” 목적으로 방한복 구입 시 사무관리비(201-01목)에 피복비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없이 지출하여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구입한 방한점퍼를 현장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관리자에게도 지급하였으며, 이를 지급 받은 자의 근무기간 중 출장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지급한 방한점퍼를 사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실이 2016년 11월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7. 1. 31. “견책”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방한복 구입 시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 편성 없이 고가의 방한점퍼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할 때까지 편성 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소청인은 위법을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소청인이 구)○○○○과 소속이었던 관계로 도내 시군의 해변 및 내수면 양식장의 수산생물 질병관리 예찰을 위하여 소득약품 및 치료제 배부와 예찰활동을 위해 동절기에 필요한 방한점퍼를 이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편성 없이 지출이 가능하였으나 감사 시 피복비구입은 강원도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관리비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상시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 방한점퍼를 현장근무 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업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출장을 실시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게 된 것은 방역 예산 중 사무관리비가 미 집행되어 본 예산을 집행코자 상위 관리자와 협의한 결과 방한복 구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을 추진한 것이고, 피소청인이 구입한 방한점퍼가 어떠한 근거나 사례 없이 단순히 고가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단순히 고가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대비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청인은 1994년 지방수산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지금까지 23여 년간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해 근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2014년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의 인사위원회 의결 시 이와 같은 공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부적절하며, 피소청인이 예산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지적한 방한점퍼는 소청인이 예산을 목적 외로 유용하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소청인이 행한 이 사건 견책의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증거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소청인 및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 변명서, 추가자료 등 일건 기록과 심사당일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청인은 2014. 10. 24. 부터 2015. 1. 1. 까지 ○○○○○본부 구) ○○○○과(현 ○○○○과)에 근무하면서, ‘방역복을 구입·관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성격상 상시 제복착용(작업복 포함)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방역복(피복)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무관리비(201-01목)에 피복비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수산생물질병 예찰용 방역' 목적으로 2014. 12. 22. 구입한 방역복(피복)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등산레저 매장에서 고가의 방한점퍼를 사무관리비(201-01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특히 2016. 11. 4. 감사일까지 위 방역복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방역복 구입이후 위 예찰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실시한 사실은 없었고, 당시 지급받은 방한복을 사적으로 사용·수익 등 실무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2016년 11월 ○○○본부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나. 판단

(1)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7. 1. 31. “견책”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은 '방역복을 구입·관리'함에 있어서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방역복(피복)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무관리비(201-01목)에 피복비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방역복(피복)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등산레저 매장에서 고가의 방한점퍼를 사무관리비(201-01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 사용 행위가 2016년 11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문답서의 비위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이 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다만, 동일 업무를 관리하였던 관리자의 경우 “방한복구입 및 관리 부적

정”과 “행정업무용 서류가방구입 및 관리 부적정”건 등 2건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견책처분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은 위 2건 중 “방한복 구입 및 관리부적정” 1건의 비위로 인해 동일하게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 또한, 모범공무원 포상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이 방한점퍼를 전량 다 회수하여 해당 부서에 반납하여 비치되어 있다는 점과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에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이 판단되고, ○○ ○분부 근무당시 강원도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고,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해양수산분야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처분을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 본 입 니 다 .

2017. 4. 17.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